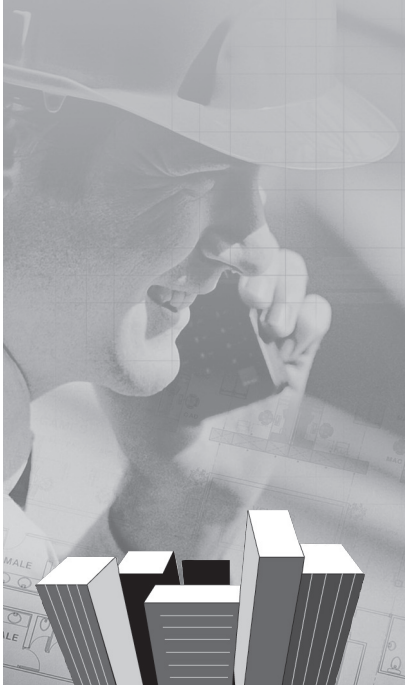


건설소식



CONSTRUCTIONNEWS

분식회계 처벌수위 높인다

법정형 상향...세무조사 강화도

한미 FTA 타결 등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비, 기업투명성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도록 반부패 청렴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이에 따라 2011년 연결재무제표가 상장사에 전면 도입되고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재정경제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등 17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성진 청렴위 위원장이 발표한 민간영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에 이어 법무부, 금감위,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장들이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또 그동안 변경된 제도와 기존 의식 간의 괴리, 기업 회계조작 및 비자금 조성, 지자체 및 공기업과 같은 일선기관의 책임성 부족 등 아직 미흡한 점들을 감안, 이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2011년 연결재무제표 도입

정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 성과에 대해 "2004년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 2005년 외부감사인 교체제 도입, 2006년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제 강화 등 꾸준한 제도 보완으로 우리나라 기업 투명성에 관한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데 반해 우리는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삼는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제도들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등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에 의거, 2011년부터 상장법인에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적용하고 공시체계를 연결재무제표로 전환키로 했다.

또 향후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을 통해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국제회계기준 적용 Pilot Test 실시 △Best Practice 발표 △국제회계기준 교육 등을 통한 기업부담 최소화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제도는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아직 경영 행태면에서 후진적 경영의식과 관행이 지

속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과거처럼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는 줄고 있으나 불법대출, 탈세, 재산증식 등 다양한 이유로 회계비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분식회계 및 뇌물제공, 탈세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 방안을 검토하고 업종별 맞춤형 윤리경영 모델을 제공해 ‘기업투명성 모니터제’를 운영, 기업의 자발적인 투명성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협조해 투명경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기업 투명성 저해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가 차원의 기업투명성 제고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주재: 청렴위 사무처장)’를 활용, 후속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기로 했다.

■ 분식회계 법정형 높인다

법무부는 분식행위에 대한 현행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기업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단, 관계기관과 협의해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15억 달러 규모의 분식회계(엔론 사건)에 대해 징역 24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올초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양형위원회’를 설치, 오는 2009년 4월까지 기업회계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공개하기로 했다.

또 8월까지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해 분식회계 등 기업관련 비리에 대해 한층 구체적이고 엄정한 처벌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8년 10월 완공예정인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센터(Digital Forensic Center)를 건립하고 기업회계범죄 전문가를 특별채용 및 양성하며 내부자 제보를 활성화 하는 등 단속 및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철저한 자금추적 수사 및 범죄수익규제법 적극 활용을 통해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기업감리주기 5년단위 정착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리당국은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와 분식회계 동기 억제를 위해 감리실시 대상을 작년 261개사에서 올해 28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주기를 현행 7년에서 장기적으로는 5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또 최근 감리유예정책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신규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기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감독당국은 감사인에 대한 경고 등 경미한 조치권과 재정부에 업무정지 등의 건의권만 행사했으나 앞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감사인 등에 대해 감사업무 전부 또는 일부정지 등을 취할 수 있겠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지주회사 설립·전환비 축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자율적 준법·윤리 경영을 위해 개별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준수를 통해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기업 내 ‘작은 공정거래위원회’인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CP 운영상황 등급평가 및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화 등도 내실화하고 도입·모범 운용기업에는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에 과징금 감경제 도입, 하도급법상 벌점 감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불투명한 경영관행 방지를 위해 불투명한 의사결정의 근본원인인 출자구조를 개선키로 하고 지주회사로 전환이 촉진 되도록 지주회사 설립·전환비용을 축소하는 한편 총수의 부당한 사익 추구 및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 가능성 방지를 위해

상품·용역 거래 등을 통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기업집단 관련 정보 공시·공개제도에 대한 내실있는 운용을 통해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기업집단정보에 대한 허브(Hub)로 관련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5월 1일 개통예정)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법규정의 미숙지 또는 무지로 인해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시·공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 분식회계 막는 세무조사

국세청은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기업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때 분식회계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분식기업은 원칙적으로 전부 세무조사를 실시,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법령 위반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할 경우 철저한 검증 뒤 환급여부를 결정

하기로 했다.

이는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부분뿐 아니라 역분식을 통한 탈세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밝히기 위한 것이다.

또 불법정치자금의 원천이 되는 기업 비자금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 비자금 조성과 관련 정보수집 확대와 함께 세무조사 때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비자금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이후 최종 귀속자를 밝혀 불법정치자금은 상속·증여세, 뇌물 및 알선수재는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엄정 추징하기로 했다.

특히 비자금 조성은 고의적인 탈세와 연관되므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포탈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 공기업별 감사전략 전개

감사원 등은 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과 독점적 지위로 태생적인 비효율성을 지닌 공기업에도 메스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대규모 기획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향후 기관별 특성(수익성·공공성 등)에 맞는 공기업 감사전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획처는 공공기관 관리·감독 권한이 주무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이관됨에 따라 경영평가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고 이를 인사·보상 등과 연계토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도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정역량을 제고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어음할인료 안 주는 사례 많다

하도급법 위반 중 67% 차지

하도급법 위반 유형 가운데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전체의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 1만2,920건 가운데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8,738건으로 전체 67.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연이자 미지급 13.9%(1,793건), 대금미지급 8.7%(1,126건), 선급금 미지급 2.7%(353건), 부당감액 0.8%(99건), 서면미교부 0.6%(82건), 대금 지연지급 0.3%(37건), 수령거부 0.2%(25건), 기타 5.2%(667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음할인료 미지급의 경우 지난 2001년 2,533건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2002년 1,270건, 2003년 1,068건, 2004년 1,169건, 2006년 1,259건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 자연이자 미지급은 2001년 201건, 2003년 280건, 2004년 297건, 2005년 343건, 2006년 472건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원도급업체들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높아지고 범위반 업체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결제비율은 1999년 34.8%에서 2000년 44.2%, 2001년 64.3%, 2002년 77.1%, 2004년 79.1%, 2006년 82.5%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반면 지난 1999년 89.3%에 달했던 현금성결제 범위반업체 비율은 2000년 81.9%, 2001년 71.1%, 2003년 62.8%, 2005년 58.5%로 6년 만에 50%대로 낮아졌다.

또 지난 1999~2006년 시정조치 금액은 27억3,9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5만6,862개의 중소기업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혜 중소기업의 수는 2001년 2만7,844개사를 기록한 후 2002년 1만9,746개사, 2003년 1만7,380개사, 2004년 1만6,517개사, 2005년 1만8,631개사, 2006년 2만464개사 등 줄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인천한들·고양풍동 2 택지개발

건교부, 46만4000평 지구지정

인천 백석동과 고양 일산 동구 풍동 일대 46만4,000평이 택지지구로 개발된다.

공동주택 용지공급은 인천 백석동이 2008년 상반기, 일산 풍동이 2009년 상반기에 각각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7만2,000평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풍·식사동 29만2,000평을 '인천 한들 및 고양 풍동2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풍동2지구에는 1만5,5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18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단독주택이 290가구, 공동주택이 4,890가구(국민임대 1,960가구, 장기임대 2,700가구 포함)다.

개발방향은 지구 내 하천을 이용한 친수공간 확보, 북측 임야의 도시공원화를 통해 그린네트워크를 갖춘 환경친화형 주거단지다.

건교부는 내년과 2009년 12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각각 마무리한 후 2010년 6월 택지공사에 착수, 2013년 6월 완공할 계획이다.

한들지구에는 1만1,419명이 입주

할 수 있는 주택 4,210가구가 들어선다.

단독주택이 180가구고 공동주택이 4,030가구(국민임대 2,280가구 포함)다.

건교부는 지구 내 도망산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지구 내외부를 연계한 녹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층 단독과 중고층 공동주택을 분산배치한다.

개발일정은 2007년 말과 2008년 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지며 2009년 6월 택지조성공사에 들어간 후 2012년 6월 완공하는 것이다.

공공주택팀 관계자는 "개발계획 승인 후 3~6개월 이내 건설사업자 대상의 공동주택 택지 공급이 가능하다"며 "내년 상반기 한들지구, 2009년 상반기 풍동2지구의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예정 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구별 교통영향 및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구별 교통난 해소를 위한 별도의 광역교통종합대책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외플랜트 90억 달러 수주

1분기 중... 작년보다 43% 증가

지난 1분기 해외플랜트 수주액이 9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및 한국플랜트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플랜트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한 89억8,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산유국들이 원유개발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석유화학시설에 재투자하고 있는 데다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전력난 해소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전력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지역에서 54억 달러를 수주,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량 증가했으며 아시아지역에서도 인도를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산유국을 중심으로 11억 달러를 따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정도 늘었다.

분야별로는 석유화학플랜트가 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2% 증가했으며 발전·담수플랜트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91% 폭증한 26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5억 달러 이상 수주가 6건 48억 달러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수주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자격 검색 쉬워진다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업종 DB 및 근거 법규 정보를 검색하는 데 사용하는 업종 DB 분류체계를 개선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련번호 방식으로 부여됐던 업종 코드를 관련 법령 코드에 맞춰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 일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영역별 업종을 분야별로 정해진 두 자리 코드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용하면 업종별 코드 확인이 쉽고 검색된 업종에는 근거 법령이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허가, 면허, 신고 등 법적 요건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를 통해 입찰 공고 때 참여업체 자격요건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업계는 입찰 전 참가자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최근 각종 인·허가 업무, 법령 정비, 학술연구 분야에서 이용되는 등 활용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콘텐츠를 확대, 더욱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덕소 한강 메가트리움 에너지절약형 인증

일반 아파트 대비 난방에너지 절감 35%

경기도 남양주 덕소 한강 메가트리움이 표준주택 대비 34.98%의 에너지절약효과를 인정받아 에너지효율 2등급을 획득했다.

메가트리움은 주상복합아파트로 16mm 복층 PVC창호를 이중 설치하는 등 최적화된 창호설계와 고효율 보일러, 고회도 방전램프 등 고효율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제어방식 등을 채택했다. 또한 정밀시공으로 기밀성을 높여 실내 온기가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일반 아파트 대비 10% 정도 감소시켰다.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는 건물의 에너지효율에 등급을 매겨 소비자들이 주택의 에너지절감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8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아파트와 비교시 일정기준 이상 에너지절감 효과가 인정될 경우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은 에너지 절감율이 표준아파트에 비해 33.5% 이상은 2등급, 13.5% 이상은 3등급을 부여한다.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예비인증은 신청 건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 등을 통해 평가된 결과를 기초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며 본

인증은 건물 완공 후 최종설계도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 평가 후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정한다.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원천적인 에너지저소비형 아파트를 건축토록 등급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에는 저리의 자금융자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인증결과는 아파트분양 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2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건물의 경우 해당 신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비 등에 대해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자금을 사업장당 최고 200억원, 사업자당 400억원 이내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3.5% 변동금리에 전용면적 m²당 1등급은 20만원, 2등급은 15만원까지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 에너지저소비형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국내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공단은 향후 인증제도 대상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선진국형 CM선보인 다

한미파슨스, 사업관리형 · 책임형 도입

한미파슨스가 국내 최초로 CM 본고장인 미국, 영국 등 선진

국에서 적용되는 방식의 CM을 건설 시장에 선보인다.

한미파슨스는 발주자가 시공회사에 건설사업 전체를 일괄도급으로 발주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CM회사를 통해 여러 전문건설업체에 분할 발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업관리형 CM' 과 '책임형 CM'을 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새로 선보이는 CM은 시공사를 대신해 CM사가 발주자의 대리인이 돼 공사비 절감과 품질상승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CM의 본래 취지를 그대로 살린 서비스다.

발주자가 CM회사를 통해 설계자와 시공자를 리드하며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CM이지만 지난 1997년 국내에 도입된 후 각종 규제로 CM 본래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관리형 CM은 공사를 일괄도급받는 시공사 없이 전체 공사를 공종별로 분할발주해 건축주와 전문건설업체들이 계약을 맺고 전문적인 관리능력을 보유한 CM회사가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써 품질은 높이고 공사비는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해 공사가 수행될 경우 보통 총공사비의 10~15%에 달하는 건설업체의 관리비 및 이윤이 5~6% 수준에 불과한 CM 용역비로 대체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사업

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계약방식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또 분할된 공사 패키지별 원가가 쉽게 비교·파악되기 때문에 비용의 투명성도 보장되며 발주자가 CM회사의 지원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한미파슨스의 경우 중국 등 해외 공사에 사업관리형 CM을 적용, 공사비를 15~30%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이미 제도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책임형 CM은 사업관리형 CM의 장점을 모두 살리면서 CM사가 발주자와 일정공사비(GMP)를 합의해 책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공사비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발주자에게 유리한 계약방식이다.

특히 한미파슨스는 책임형 CM이 대형건설업체들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건설업체가 보유한 다양한 시공단계의 지식을 설계단계에 접목해 공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CM 발생지인 미국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주로 책임형 CM을 수행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계약방식이다.

한미파슨스는 두 CM의 장점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물론 조달청,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도 도입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선진화된 계약방식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